

‘더벨’ 기자 무더기 퇴사, 그 원인은?

영리 목적으로 기업 비판기사 지시 의혹도 제기돼

최근 자본시장 전문매체 ‘더벨’(the bell)에서 올 한해에만 기자 23명이 퇴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퇴사 원인으로 더벨이 기자들에게 포럼과 컨퍼런스 자리 판매 등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디어비평 전문매체인 미디어오늘은 9월 19일 <머니투데이 ‘더벨’ 인력 3분의1 퇴사 ‘비상’>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더벨’에서 올 한해에만 약 60명의 전체 인력 중 3분의1 규모인 23명이 퇴사했다”며 “5년 차 안팎 ‘주니어’ 기자뿐 아니라 10년 차 이상의 차장급까지 다양한 연차의 기자들이 퇴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더벨 전 현직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연평균 20회 안팎의 더벨 주최 포럼 좌석 판매, 더벨에서 발간하는 책 판매 등을 요구받았다”며 영리 목적의 영업 압박이 퇴사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 기자는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기자 생활에 대한 꿈을 갖고 회사에 들어왔지만, 기자로서의 명예가 없었다”며 “위에서 주문하는 기사를 써야 하니 나도 기업에 고압적으로 대하게 돼 부끄러웠다”고 털어놨다.

<‘더벨’, 돈 벌려고 기업 비판기사 지시?>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기자들과의 인터뷰 기사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다. 더벨이 자사 기사를 볼 수 있는 1500만원의 유료 아이디를 팔려고 기자들에게 기업 비판기사를 지시했다는 정황이 나왔다는 것. 더벨 전직 기자는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특정 기업이 1500만원짜리 아이디를 더는 구매하지 않겠다고 하는 순간 데스크로부터 ‘○○기업 보세요’라고 메신저 동보가 온다. 해당 기업에 뉴스가 있든 없든 무조건 비판기사를 제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홍보업체 종사자는 더벨이 비판기사를 2단, 3단, 4단, 5단 시리즈로 쏟아내기 때문에 더벨 유료 아이디를 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가 ‘바꿔치기’ 당한 사례도 문제로 제기됐다. 더벨 전직 기자는 “특정 기업을 비판하는 기사를 더벨 페이지에 올렸다가 해당 회사들이 더벨과 합의를 하고 네이버에 나가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전했다.

현재 더벨 측은 미디어오늘의 보도와 관련해 입장 표명을 거부한 상태라는 것이 미디어오늘 측 설명이다.

한편, 광고계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내 언론환경의 어두운 현실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예”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언론사의 취재 기자들과 편집국 인원들이 광고/협찬 영업에 나서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광고주협회 관계자는 “악의적 보도를 무기로 기업에게 광고/협찬을 요구하는 유사언론행위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라며 “해마다 천개씩 늘어나는 인터넷매체들로 인해 기업들이 입는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루 빨리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KAA** 유재형 yoojh1999@kaa.or.kr